

도내 공공비축미 배정량 턱없이 적어

총 50만톤 중 전북 몫 7만톤으로 전국 5위... 재배면적·생산량은 전국3위... 10년전 매입실적 영향

정부가 전년도 벼 수매량을 토대로 시·도별 배정물량을 산출해 해마다 배정물량이 부족한 도내 농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전라북도는 17일 전국적으로 공공비축미 수매물량이 50만톤이며, 전북 몫은 7만795톤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산물벼 12만5천톤과 포대벼 37만5천톤 등 총 50만톤을 매입한다는 방침이다.

이 중 전북은 산물벼 8천톤과 포대벼 6만2천773톤 등 총 7만795톤이 배정됐다.

올해 배정물량은 전남(12만2천692톤)이 가장 많고, 경북(8만599톤), 충남(7만3천300톤), 경남(7만1천882톤)에 이어 전북은 다섯 번째 규모다.

도내 농민들은 이러한 정부의 배정물량

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올해 전북의 쌀 재배면적은 12만1천26ha로 집계됐다. 이는 전남(16만6천444ha)과 충남(13만7천354ha)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다. 쌀 생산량은 68만6천131톤으로 재배면적과 함께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연히 쌀의 생산량과 재배면적 등을 감안하면 공공비축미 배정물량 또한 이에 준해서 결정돼야 한다는 의견이지만 전북의 배정물량은 경남이나 경북 수준조차 배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정부가 시도별 공공비축미 배정물량 산출근거로 쌀의 생산량과 재배면적을 감안하지 않으면서 도출되는 결과다.

그동안 정부는 전년도 공공비축미 매입 실적을 중심으로 시도별 배정물량을 산출

해 왔다.

도내는 지난 2005년 쌀값폭등으로 일부 시군에서 공공비축미 매입에 동참하지 않았다. 그 원인으로 매입실적은 2005년 16만2천713톤에서 2006년 11만1천230톤까지 떨어졌다.

매입실적이 하락하면서 현재까지 공공비축미 배정물량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10년 전 상황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그나마 정부는 올해부터 공공비축미 배정물량 산출근거로 벼 재배면적을 10% 포함시켰다. 정부는 단계적으로 재배면적 비율을 늘려가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도내 농가들은 적정수준의 물량배정이 이뤄지려면 앞으로 수년이 소요된다는 의견이다. 올해의 경우 시도별 물

량배정 산출근거 중 전년도 공공비축미 매입실적이 80% 포함되는 등 여전히 많은 비중을 점유하면서다.

특히 올해 쌀값이 하락하면서 농가들의 불만이 더욱 커지고 있다.

올해 공공수매의 우선지급금(40kg, 미국)은 현재까지 4만5천원으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농협RPC 등을 통한 일반 수매가격의 우선지급금은 4만~3만5천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공공수매가격과 일반수매가격의 격차가 커 공공수매 배정물량이 적은 도내 농가들은 상대적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

도내 농민단체 관계자는 “쌀이 생산되면 공공수매량도 많아 하겠지만 전북은 수년째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김민근 기자

송성환, 전주완산자율방범회 감사패

전북도의회 송성환 행정자치위원장(사)전주완산자율방범연합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지난 10일 오전 11시 사)전주완산자율방범연합회(회장 양은옥) 한마음체육대회에서 회장 및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평소 방범연합회 활동에 헌신한 송성환 위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송성환 위원장은 평소 '민(民意)은 지역에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지역밀착형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숙원사업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행정자치위원장으로서는 전북도 도정 전반의 감시와 견제의 역할에 매진하고 있다.

송성환 위원장은 “지방적으로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하시는 방범연합회에서 주신 감사패라 더욱 값지다”면서 “이런 활동들이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자양분이 되는 만큼, 앞으로도 활동여건 개선과 애로사항 해결에 적극 나서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고민형 기자



송성환 의원

정세균 국회의장, 법인세 인상안 예산부수법안 지정 가능성 시사

정세균 국회의장은 17일 법인세·소득세법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하는 문제와 관련,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국회법에 따라서 법과 원칙에 따라 그 절차를 처리할 수밖에 없다”며 법인세 인상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6 세법 개정안 토론회' 축사에서 “어떤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법과 원칙을 넘어설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리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장은 “본질은 여야의 지혜를 모아 합의하는 것이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라는 말씀을 드린다”며 “의정으로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모든 세법개정안이 여야가 합의를 해서 그 합의안이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겠다”고 했다.

그는 “이번 세법개정안은 국회 상임위에서 서로 합의하러 말씀드리고 싶다. 그런 합의가 이뤄지도록 의정으로서 최선의 지원과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 의장은 그러면서 “이제 의정을 경우에 따라서는 압박을 해서 자기 정파에 유리한 상황을 만들려 한다면 그건 국회의 원래 존립 가치 자체를 뒤흔드는 옳지 않은 상황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국회법 85조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세입 예산부수법안을 지정할 수 있다.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되면 국회는 11월30일까지 심사를 마쳐야 한다. 기간 내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예산부수법안은 다음날 본회의에 부의된다. 정 의장이 법인세 인상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하면 야당 주도로 통과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뉴시스



도의회 환경복지위, 현지의정활동 전개

고창 장애인복지관·운곡 람사르습지 등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최훈열)는 17일 고창 장애인복지관 건립현장과 운곡 람사르습지를 찾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종합사회복지관과 보건소를 둘러보는 현지의정활동을 펼쳤다.

위원들은 현재 건립 중인 고창군장애인복지관 건립현장을 방문하여 진행상황을 청취·확인하고, 장애인복지관이 고창군사회복지시설지구(고창읍 을계리 110) 내에 건립되는 만큼 타 시설과 연계하여 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당부하였다.

이어 위원들은 인근의 종합사회복지관과 보건소를 방문하여 시설을 견학하고, 지역주민들과 소통 및 근무자들을 격려하는 자리를 가졌다.

최훈열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장애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장애인분들과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때”라며 “따뜻한 사회분위기 조성과 함께하는 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꾸준한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오후에 진행된 환경복지위원회의 운곡 람사르습지 방문은 습지가 지난해 전북도 1시군 1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된 후에 본격적인 조성사업이 추진되기 전 현장조사를 위해 추진되었으며, 이날 환경복지위원들은 생태관광지 조성사업을 청취하고 현장을 확인하고,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생태탐방로 및 생태마을 조성 등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고민형 기자

국민의당 “정유라 역대 최연소 의혹덩어리”

국민의당은 17일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의 이대 특례입학 등 각종 특혜 의혹과 관련, “정유라는 아마도 역대 최연소 의혹덩어리에 등극할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장진영 국민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인 최순실은 자신의 딸 정유라를 이화여대에 부정입학시키고 학점도 부정 취득시켰으며 마사회와 대기업을 동원해 스폰서십을 부정지원하고 현원수당까지 부정수급하고 했다는 의혹을 한몸에 받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변인은 “박 대통령이 걱정한다고 말하는 이 땅의 청년들은 최순실의 딸 정유라 같은 금수저들의 반칙과 부정부조로 가슴에 피멍이 들고 있다”며 “정유라가 수업에 들어오지도 않고도 B 이상의 학점을 받았다는 소식은 밤을 새워 가며 과제를 제출했던 평범한 학생들을 분노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순실과 정유라가 이 땅의 청년들에게 절망과 좌절을 줬다면 박 대통령은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를 지시해야 당연하다”며 “그러나 최측근이라는 이유로 박 대통령은 최순실과 정유라를 둘러싼 온갖 의혹에 대해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외면하고 있다. 이라고도 청년들 얼굴을 보고 걱정하고 있다는 말을 또 할 수 있는가”라고 따졌다. /뉴시스

민주당 “우병우 교체설은 꿈수, 국감 출석해야”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교체설과 관련,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다. 용납할 수 없는 ‘꿈수’ 중의 ‘꿈수’”라고 비난했다.

기동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국회 운영이 출석을 앞두고 ‘우 수석 교체설’이 나왔다. ‘국정혼란’을 해소하고 안보위기 대응에 집중하기 위해 결심했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기 대변인은 “이석수 특감의 사표 수리로 국감을 피해가더니 이제는 우 수석마저 잘라내고 화살을 피해보겠다는 것인가”라며 “우 수석은 국정감사에 출석해야 한다. 국민과 국회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윤관석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국정실태 논란의 핵심인 우 수석이 국회에 나오지 않는다면 완벽한 국민 무시”라며 “우 수석의 국회 출석은 국회법에 따라 여야가 합의해 기관증인으로 채택한 것이다. 나오지 않는다면 철저한 국회 무시”라고 지적했다.

윤 대변인은 “우 수석은 국회 출석에 응해야 한다. 나오지 못한다면 국민의 의문에 답하기를 거부한 것이며 권력의 검은 장막에 숨어 국정을 농단해왔음을 시인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뉴시스

노회찬 “우병우 국감 출석 뒤 민정수석 교체해야”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17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교체설에 대해 “교체를 하더라도 청와대 국감에 증인으로 출두한 뒤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에서 “이번 교체 검토가 21일로 예정된 청와대 국감에 앞서 기관증인에서 배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라면 이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이는 대통령에 의해 자행되는 또 한번의 증인 빼돌리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 수석은 21일로 예정된 청와대 국감에 반드시 출석해 의혹에 대해 명백히 해명해야 한다”며 “우 수석에 대한 의혹은 덮어 두고 불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뉴시스



2017 무주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세계는 무주태권도원으로, 태권도로 하나되는 지구촌!



2017 전북 무주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6.22-30 (9일간)